

“무조건 승소하는 변호사” “먹튀 변호사” 선 넘는 변호사들, 변화된 법무부가 나섭니다.

- 부당기대유발 광고, 연고관계 선전 광고, 결과 예측 광고 등,
소비자 선택 왜곡하는 부당 광고에 대한 징계 강화 -
- 성실의무 위반 등 소비자에 직접 피해 입히는 불량 변호사들,
법무부 전담 조사팀 구성하여 신속 처리 -

□ 국민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부당 광고에 대한 징계 강화

최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징계 결정 사례

- 법무법인 A는 홈페이지에 “고객 선호 브랜드지수 3년 연속 1위”라고 광고하였으나, 이는 광고비를 지급하고 한 마케팅이었을 뿐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 변호사 B는 동일한 법적분쟁에 처한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승소 가능성 90% 이상이고, 손해배상 부분은 99% 승소예상된다”라고 장담하며 사람들을 유인, 수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결국 모두 패소하였습니다.
- 판·검사, 경찰 출신 변호사들이 소속되어 있는 법무법인 C는 “전관예우변호사 C법인”이라는 표현으로 광고하고, “선임 전 무료 사건 분석, 형량 예측 서비스 제공”한다고 광고하여 광고 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최근 변호사 간 경쟁이 심해짐에 따라, 부당한 기대를 유발하거나 공무원과의 연고관계를 선전하는 등 국민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하고 사법절차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광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접수되는 광고규정 위반 징계 사건 역시 '21년 1건(전체 10건)에서 '25년 88건(전체 124건)으로 급증하였고, 현재 법무부에 계류된 사건 114건 중 절반을 넘는 79건이 광고규정 위반 사건에 해당합니다.

법무부는 최근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전관 변호사의 이력 표시 광고’의 실질이 단순 프로필 표시를 넘어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암시하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결정하는 등 과거의 선례나 관행에 의존하지 않고 국민의 높아진 공적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법조윤리의 기준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성실의무를 저버린 변호사들에 대한 조사 강화 및 신속·엄정 처리

최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징계 결정 사례

- 변호사 D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하고도 법원의 보정명령을 무시하여 소송 각하의 위험을 초래하고, 본인이 피의자로 수사 중인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허위 진술 해줄 것을 종용하였습니다. **[정직 6월]**
- 변호사 E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다수의 사건을 현저히 저렴한 수임료에 수임한 뒤, 잘못된 법률조언을 제공하거나 아무런 업무도 수행하지 않았으며, 수임료 반환을 요구하는 의뢰인들에게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정직 1년]**
- 변호사 F는 수임료 2,000만 원을 받고도 위임계약서 작성을 미루고, 수사기록 열람 조차 하지 않으며 사건을 방치하였고, 의뢰인이 보내준 증거자료 원본을 분실하고, 입원하였다고 거짓말까지 하며 증인신문 기일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제명]**
- 변호사 G는 의뢰인으로부터 3억 원 상당의 공탁금을 수령한 뒤 제대로 된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이를 모두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소비했습니다. **[제명]**

→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사안의 혐의 및 양정을 면밀 검토하여, 징계혐의자인 변호사들의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법률소비자인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률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성실의무를 위반한 변호사에 대한 조사와 징계 역시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중대 위반 행위자 우선 처리’ 원칙을 세우고 국민들에게 추가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신속히 결정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변호사협회로부터 인계받은 기록만으로 그 당부를 판단하던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최근 사건을 조사·검토하는 전담팀을 구성하였고, 기초 사실관계의 확인부터 의뢰인의 피해회복에 이르기까지, 전화조사·추가자료 확보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건을 검토하여 위반 행위의 실질에 맞는 징계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 중대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힌 변호사들에 대하여는 위반 횟수, 피해 규모, 의뢰인들의 징계 의사 등을 고려, 더욱 엄격한 양정 판단으로 정직, 제명 등의 중징계 처분을 유지함으로써 변호사 업무수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치밀한 증거조사와 법리 검토, 실질에 맞는 양정 판단의 노력에 더하여, 징계혐의자인 변호사들이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법무부는 수회에 걸친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고, 다수의 서면을 제출하는 등 충실한 소송수행을 통해 패소 0건이라는 실적을 달성하기도 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매년 약 3회 개최되어 오던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올해 6회까지 확대 실시하고 심의 방식을 효율화하여 회차당 처리 건수도 더욱 늘려나갈 예정으로, 심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법률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26. 3. ~ 6. 심의·의결 건수 총 97건('24년 25건, '25년 85건 총 처리) ☒

담당 부서	법무실	책임자	과 장 이 윤 구	(02-2110-3175)
	법무과	담당자	검 사 강 인 선	(02-2110-3923)

